

202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제 국

목 차

I 취득세 1

지방세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증여의제(법 § 7¹¹ 등) ... 3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법 § 10의3² · 영 § 18의2) 7
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법 § 10의6²) 9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법 § 13⁵) 11
5. 취득세 종과 고급주택 기준 개선(법 § 13⁵) 13
6.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종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법 § 20² · ③ 등) 17
7.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법 § 21³) 27

지방세법 시행령

1. 시가인정액 유사부동산 평가기간 보완(영 § 14⁵) 31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판단기준 개선(영 § 14의2) 33
3. CR리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제외 연장(영 § 28의2.16) ... 35
4.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영 § 28의2.17 신설 등) 37
5.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설(영 § 28의2.18 신설 등) 41
6. 무상취득 주택 종과제외 직계존비속 범위 개선(영 § 28의6) 45

II 등록면허세(등록분) 47

지방세법 시행령

1. 인용 조문 정비(영 § 42의2⁴) 49

Ⅲ 등록면허세(면허분) 51

지방세법 시행령

1. 일회성 과세 면허의 정비(영 § 51) 53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영 § 39 관련 별표1) 55

Ⅳ 담배소비세 59

지방세법령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법 § 52①) 61
2.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영 § 71) 63
3.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 [규칙 § 32, 별지 32, 32호의2, 33, 33호의2 서식] 67

Ⅴ 지방소비세 73

지방세법령

1.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법 § 71③4) 75
2.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영 § 75②) 79

Ⅵ 주민세 85

지방세법 시행령

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영 § 78의2] .. 87
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영 § 78의2] ... 93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규칙 § 37, 별지 제37호] 97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보완 [규칙 § 38의3, 별지 제39호의2] ... 101

VII 지방소득세105

지방세법

1.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법 § 93②)107
2.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법 § 103의3⑧)111
3.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법 § 103의19)113
4.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법 § 103의20①)117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법 § 103의23①)119

지방세법 시행령 · 규칙

1.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정비(영 § 100의8①)123
2.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영 § 100의10)125
3.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규칙 § 48의4 등) 129

VIII 재산세 141

지방세법

1.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법 § 107②, 영 § 106) 143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법 § 108)147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법 § 112)149
4.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법 § 119의2①) 153

지방세법 시행령

1. 자동차검사용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영 § 101③)157
2. 매립 · 간척 토지의 분리과세 기산일과 취득일 정합성 제고(영 § 102⑦)159
3. 철거 ·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 (영 § 103의2) 161

4.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영 §103의2 §118] · 163
5.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범위 확대 [영 § 110의2①]167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 [규칙 §60] · 175
2.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개선 [규칙 § 58 서식 제59의3] 179

IX 자동차세185

지방세법령

1. 자동차세 연납 규정 관련 조문 정비 [법 § 128③ · ④]187
2. 자동차세 연납 규정 관련 조문 정비 [영 § 125③]191

X 지역자원시설세 193

지방세법

1.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 [법 § 147②] 195
2.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특정시설분 신규 과세 [법 § 142 등] 197
3. 화력발전에 대한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 [법 § 146②제3호] 205

I . 취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거래 시 증여의제

(법 §7⑪·§10의3②, 영 §11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input type="checkbox"/>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취득 시 유상세율 적용 사유</p> <p>○ (원칙) 무상세율 ※ 증여의제</p> <p>○ (예외) 유상세율</p>	<p><input type="checkbox"/>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기준 신설</p> <p>○ (좌 동)</p> <p>○ (예외) 유상세율</p>
<p>【유상세율 적용 사유】</p> <p>① 공매,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 취득</p> <p>②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 취득</p> <p>③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 교환</p> <p>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p>	<p>【유상세율 적용 사유】</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 → (단서신설) 시가인정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p>
<p><input type="checkbox"/>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취득 인정 범위</p> <p>○ < 신 설 ></p> <p>※ 대가지급 사실 및 금원(소득 등) 출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의 적정 범위 여부 등은 판단기준 아님(지방세법 §7⑪4호)</p>	<p><input type="checkbox"/> 유상취득에서 배제하는 지급 대가와 차액 불인정 기준 신설</p> <p>○ <u>시가인정액* - 지급대가</u></p> <p>① <u>3억원 이상</u> 또는</p> <p>② <u>시가인정액의 30% 이상</u></p> <p>*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p>

□ 개정내용

- (법 §7⑪)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을 유상거래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 (영 §11의3) 유상세율 적용 배제 기준을 지급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으로 함
 -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법 §10의3②)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법 제7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유상거래시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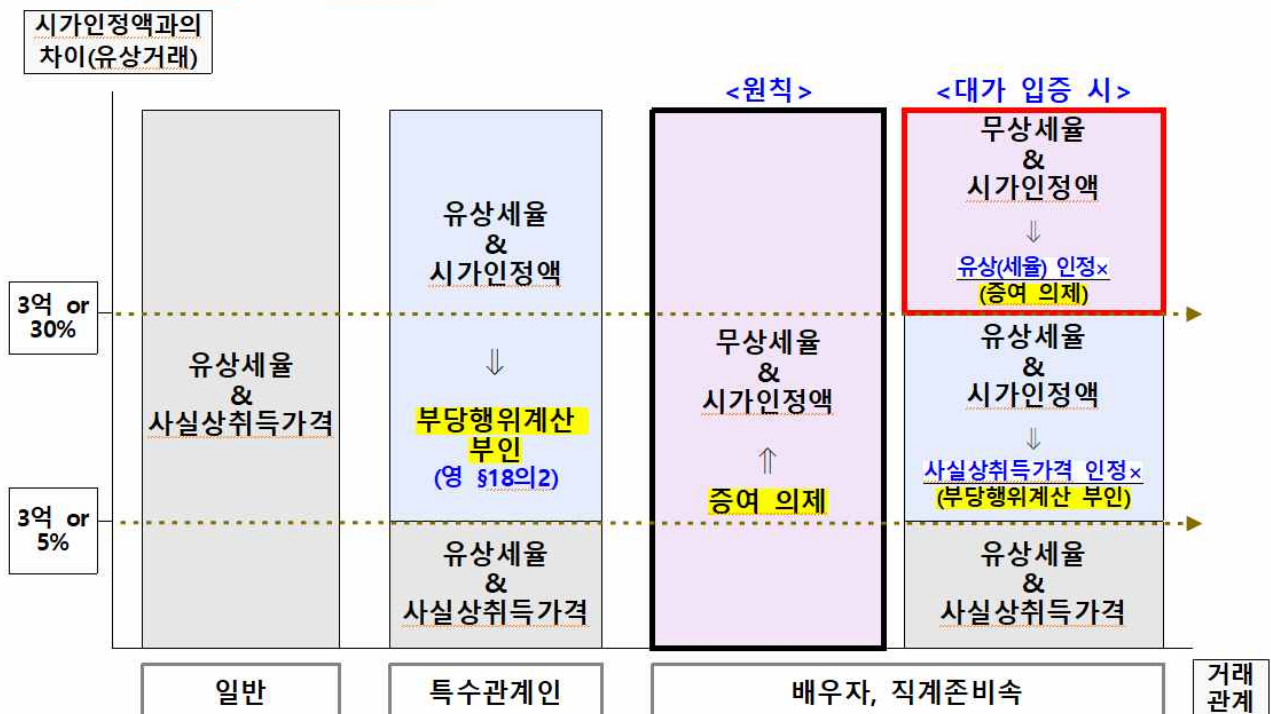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유상거래 매도·매수자간 관계에 따른 세율 및 과표 적용 비교 ← 개정안 반영 효과】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유상</u> 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⑪ ----- ----- -----. ----- ----- <u>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단서 신설>	4. ----- ----- ----- ------. <u>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 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략)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u>거래</u> 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시가인정액</u> 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 ----- <u>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 ----- <u>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3억원 이상이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u>
<u>제11조의3</u> (생략)	<u>제11조의4</u>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법 §10의3②·영 §1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input type="radio"/> (원칙) 시가인정액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예외)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개정내용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구분	무상취득(§10의2)	부당행위계산(§10의3)	
		현행	개정
원칙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	(좌 동)
예외	시가표준액	규정 無	시가표준액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략)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 -----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 -----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 ----- -----.

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법§10의6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input type="radio"/>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input type="radio"/> (예외) 시가표준액 - <u>개인에 한하여</u>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예외) 시가표준액 - <u>개인과 법인 모두</u>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개정내용

- 법인의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과세표준 적용(부동산세제과-2669, '24.8.2.)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생략)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 ----- -----.
<신설> <신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법§13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 <input type="radio"/> 회원제 골프장 신·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 *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과 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 개정내용

-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골프장 취득세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 신·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 *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추가)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4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 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 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 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 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 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 제 2. ~ 5. (생략) ⑥ ~ ⑧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등록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 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 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 ----- -----.

5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개선(법 §13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 고급주택 기준 개선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면적 & 가격	단독 주택	면적 건물 331㎡ ↑ 토지 662㎡ ↑	& 공시가격 9억원	면적 & 가격	단독 주택	면적 & 가격	가격
	공동 주택	전용면적 245㎡ ↑ (복층 274㎡ ↑)			공동 주택		
시설	단독 주택	엘리베이터(200kg ↑, 9억원 ↑) 에스컬레이터, 수영장(67㎡ ↑)		시설	단독 주택	< 폐 지 >	

□ 개정내용

-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요건을 삭제
※ 면적 및 가격 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예정('26년 上)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p>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u>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u>.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 5. (생략)</p> <p>⑥ ~ ⑧ (생략)</p>	<p>3. ----- ----- <u>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u>. ----- ----- ----- ----- ----- ----- ----- ----- ----- -----.</p> <p>4. ~ 5. (현행과 같음)</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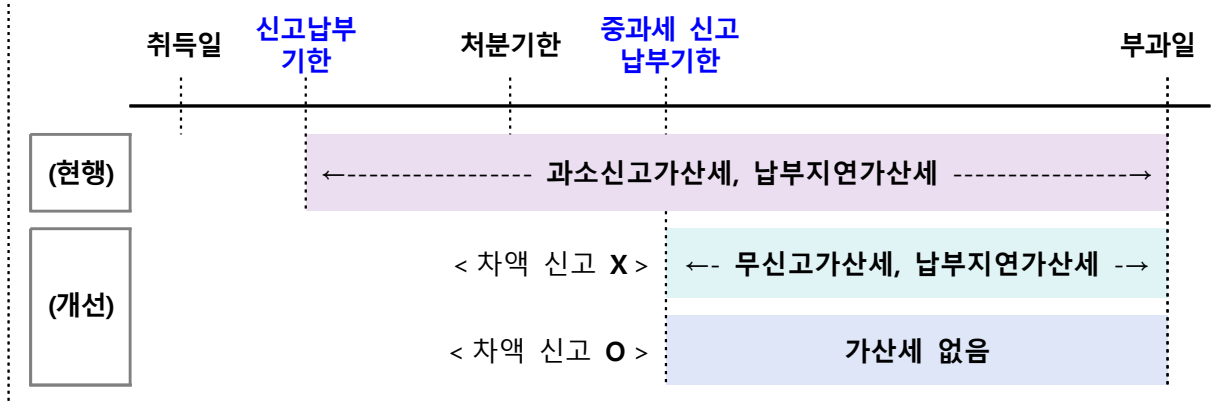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 <input type="radio"/> (신고·납부절차) 없음(추징) <input type="radio"/> (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 <u>가산세 부과</u> ** * 중과세율 적용세액 - 기납부세액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 <input type="radio"/> (신고·납부절차) 신설* *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input type="radio"/> (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 <u>가산세 없음</u>
<input type="checkbox"/> 주택 취득 이후 중과세 해당 시 신고납부기한 기산일 <input type="radio"/> < <u>신 설</u> > (영 §34) (제6호 가목~카목 신설) (제7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저가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제8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저가 오피스텔 (제9호 신설) <input type="radio"/> 일시적 2주택 기간, 종전 주택 정의 등(영 §36의3)	<input type="checkbox"/> 취득 이후 법인 주택 등 중과세 신고납부에 따른 기산일 신설 <input type="radio"/> 법인 등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 배제 사유 발생 등 - 중과 예외 조건 미충족으로 중과 전환 및 주택 수 포함 : 해당 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주택) : 해당 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오피스텔) : 해당 사유 발생일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등 미처분 : 일시적 2주택 기간 경과일 <input type="radio"/> < <u>삭 제</u> >

□ 개정내용

-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이 배제되는 사유 발생* 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 * 멸실예정 주택의 멸실·신축·판매 기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의 경과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신고·납부 시 가산세 無
- ※ 비과세·감면 추정 및 과밀억제권역·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등과 동일하게 부족세액 등을 일정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참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내 미처분 시 가산세 부담 비교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법인 등이 202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
-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 뿐 아니라, 중과세 예외 미적용 주택으로 인해 주택수 계산, 적용세율 등이 달라지는 다른 주택에도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6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 음)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 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 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 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 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제1항부 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 의2제1항의 세율----- 제13 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 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 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	③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개정 전	개정 후
<p>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u>제13조의3</u>, <u>제14조</u> 및 <u>제15조</u>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1. (생략)</p> <p>2. 삭제</p> <p>3. <u>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u></p> <p>②·③ (생략)</p>	<p>-----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p> <p>① ----- ----- ----- ----- <u>제13조의3</u> 및 <u>제14조</u>부터 <u>제16조까지</u>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③ (생략)</p>

□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u> <u>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u> <u>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u> <u>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u>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
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
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
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
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
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
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신 설>

<신 설>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
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
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
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
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
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
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
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
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

<신 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

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삭 제>

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

----- 이 조 -----

----- 이 조 -----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input type="radio"/> 면제 대상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 대상 ○ 시가인정액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종류 보완 ○ 면제 대상 가산세 - (삭 제) - (좌 동) - 납부지연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대상 명확화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개정내용

- 최초 취득신고 시 시가인정액 등*으로 신고한 이후 정확한 시가인정액으로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10의2①)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10의2②3호)

- 종전 규정에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규정이 없으나 지침에 따라 면제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명문화

*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음

- 또한, 최초에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후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

※ 실무상 업무 지침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한 경우에 수정신고 가능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부족세액의 추정 및 가산세) ①·② (생략)	제21조(부족세액의 추정 및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u>시가인정액</u> 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u>시가인정액</u> 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 ----- <u>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u> ----- ----- <u>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u>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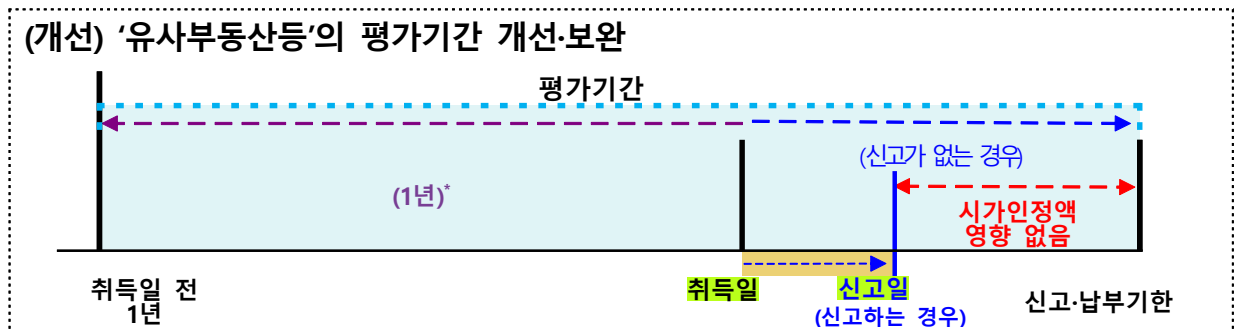
1 시가인정액 유사부동산 평가기간 보완(영§14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input type="radio"/> 취득일 전 1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 * 평가기간 이내에 면적, 위치, 종류, 용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	<input type="checkbox"/> 평가기간 보완 <input type="radio"/> 취득일 전 1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

□ 개정내용

- 납세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의 종료 시점을 신고일로 개선·보완
 - ※ 「상증세법」(영 §49④)상 유사재산의 시가 판단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의 신고일이 기준
 - 납세자가 신고 당시 시가인정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함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현행	개정안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생략)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⑤ ----- ----- ----- ----- ----- ----- ----- ----- ----- ----- ----- ----- ----- ----- ----- <u>(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u>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판단기준 개선(영§14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input type="radio"/> 부동산등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 등) 취득시 가액기준 불비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 : 시가표준액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3. 그 외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div>	<input type="checkbox"/>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기준 개선 <input type="radio"/> 부동산등의 일부(지분) 취득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div style="margin-top: 10px;"> <p><u>일부 지분 취득 시</u> ⇒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p> <p><u>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 시</u>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p> </div>

□ 개정내용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 산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u>시가표준액</u> 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 ----- -- <u>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u> ---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중과제외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CR리츠 : 부채상환·회생절차 매각 등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2 1호 다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3. 28. ~ <u>2025. 12. 31.</u> ○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유상취득 	<input type="checkbox"/> 중과 제외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기간 ⇒ 1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3. 28. ~ <u>2026. 12. 31.</u> ○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세 제외기간을 1년 연장('25년→'26년)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중과세 제외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 ----- ----- ----- ----- -----.
1. ~ 15. (생략)	1. ~ 15. (생략)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16. ----- ----- ----- ----- 2026년 12월 31일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영§28의2 17호 신설 등)

1 개정개요

※ 지역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개정 전	개정 후
<p>□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세제지원(주택 수 제외)</p> <p>*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p> <p>○ 주택 수 제외</p> <p>- (대상) 수도권 外 소재,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이하의 주택</p> <p>- (적용기간) '24.1.10. ~ '25.12.31.</p> <p>○ 주택 수 제외 기간</p> <p>- '24.1.10. ~ '26.12.31.</p>	<p>□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강화(*중과제외 신설 등)</p> <p>○ 중과제외(1년간)</p> <p>- (대상) 좌 동</p> <p>- (적용기간) '26.1.1. ~ '26.12.31.</p> <p>○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p> <p>- '24.1.10. ~ '27.12.31.</p>

□ 개정내용

- 수도권 外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외(~'26년 말) 및 주택 수 제외(~'27년 말)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수도권 外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 제외 기간을 1년 연장(~'26년 말→~'27년 말)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16. (생략) <u><신설></u>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 ----- ----- ----- ----- -----. 1. ~ 16. (생략)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생략)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 마. (생략)

<신설>

2. ~ 9. (생략)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생략)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8호-----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2. ~ 9.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27년 12월 31일-----.

5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설(영§28의2 18호 신설 등)

1 개정개요

※ 지역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강화(중과예외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 중과세 제외(요건 모두 충족시) :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 취득 후 60일 내 등록 필요,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 시 제외 ② 취득기간 : '26.1.1. ~ '26.12.31. ③ 취득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임대주택 으로 사용시 해당 주택

□ 개정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 (영 §28의2 18호) 등록임대사업자가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60일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제외
 - (영 §28의4⑥ 1호나목) 중과세 제외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4. (생략)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 ----- ----- -----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17. (생략)

<신설>

-----.

6. ~ 17. (생략)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생략)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 바. (생략)

<신설>

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8호-----

다. ~ 바. (생략)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6

무상취득 주택 종과제외 직계존비속 범위 개선(영§28의6)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증여)시 종과 제외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증여)시 종과 제외 대상 보완	
증여자	취득자(수증자)	증여자	취득자(수증자)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신 설)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신 설)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개정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시 종과 제외 대상에 ①직계 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 및 ②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추가

※ (배우자의 범위) 사실혼 및 생계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상 이혼한 경우 제외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종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II.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인용 조문 정비(영§42의2④)

1 개정개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 <input type="radio"/>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input type="radio"/>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input type="checkbox"/>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 조문 정비 및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인용 조문 정비 등

☐ 개정내용

- 인용법령 변경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과세제외 대상 규정 정비

< 인용법령 변동사항 >

종 전	변 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현행	개정안
<p>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p>

III.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일회성 과세 면허의 정비(영§5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일회성 과세 대상 명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제44호) <input type="checkbox"/>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과세 면허 정비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제44호)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제46호)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제47호)

☐ 개정내용

- 면허 성격 및 타 면허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일회성 면허 지정
 -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 취급 시, 영업자(사업자) 단위의 영업허가(정기과세 대상)에서 금지물질, 허가물질과 동일한 품목별 허가·신고로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일회성 과세하는 면허인 건축허가와 유사함을 고려
 -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면허 과세대상 정비 및 시설착공을 위해 한 번만 부여하는 건설허가는 일회성 과세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43. (생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신설>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신설>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39 관련 별표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p> <p>○ < 신 설 ></p> <p>○ < 신 설 ></p> <p>○ < 신 설 ></p> <p>○ < 신 설 ></p>	<p>□ 관계법령 재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표1) 신설</p> <p>○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3종 275호)</p> <p>○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제4종 213호)</p> <p>○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제4종 214호)</p> <p>○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 물질 사용 신고(제5종 제49호)</p>
<p>□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p> <p>○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 사용 허가(제4종 103호)</p> <p>○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제4종 104호)</p>	<p>□ 관계법령 재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표1) 조정</p> <p>○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 허가(제4종 103호)</p> <p>○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제4종 104호)</p>

○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제4종 208호)	○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u>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u> (제4종 208호)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제4종 209호)	< 삭 제 >

□ 개정내용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의료관리법」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등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명 수정*

* 예. (종전)「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서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허가

→ (개정)「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서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 허가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원자력안전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설된 면허 중 '25.12.31. 이전 득한 면허는 '26.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부과

2 개정조문(영 별표1)

개정 전	개정 후
<p>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u>< 신 설 ></u></p> <p><u>27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u></p> <p><제4종> <u>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u>사용</u>·이동사용 허가</u></p> <p><u>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u></p> <p><u>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u></p> <p><u>209.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u>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u></u></p> <p><u>< 신 설 ></u></p>	<p>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u>275.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관측영업자의 신고</u></p> <p><u>27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u></p> <p><제4종> <u>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u>사용(소지·취급 포함)</u>·이동사용 허가</u></p> <p><u>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u></p> <p><u>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u></p> <p><u>< 삭 제 ></u></p> <p><u>213.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u></p>

개정 전	개정 후
<p><u>< 신 설 ></u></p> <p><u>213.</u>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p> <p>〈제5종〉</p> <p><u>< 신 설 ></u></p> <p><u>49.</u>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p>	<p><u>214.</u> 「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건설·운영허가</p> <p><u>215.</u>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p> <p>〈제5종〉</p> <p><u>49.</u>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p> <p><u>50.</u>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p>

IV. 담배소비세 개정내용

지방세법령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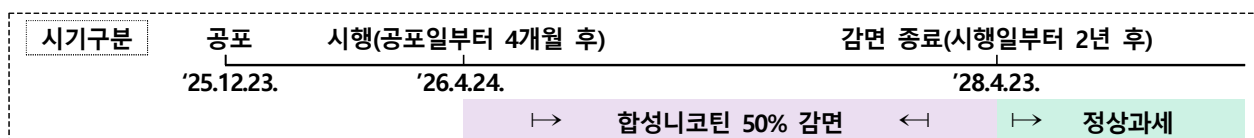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법§52①)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미포함</p> <p>○ 「담배사업법」상 담배* 아님</p> <p>* "담배"란 <u>연초의 잎을</u>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 제조한 것을 말한다.</p> <p>○ (신 설)</p>	<p>□ 합성니코틴 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26.4.24.시행)</p> <p>○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p> <p>* "담배"란 <u>연초나 니코틴을</u>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 제조한 것을 말한다.</p> <p>< 「담배사업법」 기재위 심사시 부대의견 >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u>개별소비세</u> 등 제세부담금 한시적 감면 추진"</p> <p>○ 「개별소비세법」 개정(2년간 50% 감면)</p> <p>○ 「지방세법」도 담배소비세 세율 규정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50% 감면하는 규정 신설</p>

□ 개정 내용

- (감면수준) 담배소비세의 50%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43.99%)는 자동 감면
⇒ 지방세법 §52①(세율) 단서 신설 :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
- (감면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 부칙 유효기간 : 지방세법 §52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의 다음날('28.4.24.)부터 정상 과세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52조(세율) ① ----- -----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담배사업법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지방세법」 개정('26.4.24.시행)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삭제)~~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영§71)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조례 감면(영§71)</p> <p>① (담보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 반출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 既납부세액 - 수입판매업자 : 수입신고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 既납부세액 <p>② (수입판매업자 통관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세담보 제공 → ②관할 시장·군수는 납세담보확인서 발행 → ③세관장에게 제출 → ④세관장은 담보물량 범위에서 통관 허용 <p>③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요건* 충족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 <u>담보금액 감면</u> <p>* 담배 반출일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 및 고의 회피사실 無</p> <p>** (서울시 조례) 납세담보 50% 감면</p>	<p>□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 법령 상향 및 감면을 면제로 규정(영§71)</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요건* 충족시 <u>납세담보금액을 전액 면제</u>하도록 시행령 개정 <p>* 담배 반출일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 및 고의 회피사실 無</p>

□ 개정 내용

-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조례 감면 지자체는 서울시 1곳 뿐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

* 현행 수입판매업자 461개 업체 중 458개는 담보제공 없이 담배소비세를 미리 납부하고 반출(법 §64④), 나머지 3개 업체(1개는 50% 조례 감면)는 납세담보 제공 중

- 유사한 성격의 지방세(주행분 자동차세) 및 담배에 붙는 다른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관·부가세, 건강부담금)과의 운영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 우려
⇒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납세담보 면제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 략)	제71조(납세 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② ----- ----- ----- -----발급한 납 세담보제공확인서----- ----- 납세담보제공확인 서에 ----- ----- -----.

개정 전	개정 후
<p>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u>반출한 날부터 3년간</u> 담배 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 ----- ----- -----.</p> <p>③ ----- ----- ----- ----- -- <u>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u> ----- ----- ----- <u>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u></p>

개정 전	개정 후
	<u>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

(규칙§32,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수입 담배 통관시 세관장에게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출(규칙§32)</p> <p>○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납세담보 제공 후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별지 제32호)를 신청 → 납세담보확인서(별지 제33호)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p> <p>○ (신 설)</p>	<p>□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등 서식 신설(규칙§32)</p> <p>○ (현행과 동일)</p> <p>○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경우도 세관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 신설*</p> <p>* (별지 제33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별지 제33호의2) 납세담보면제확인서</p>

□ 개정 내용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면제받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및 발급받는 서류* 서식 정비

* **납세담보 제공시** : 납세담보제공확인 발급신청서 제출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납세담보 면제시 :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제출 →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발급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p>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u>납세담보확인서의</u>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u>납세담보확인서는</u>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p> <p><u><신 설></u></p>	<p>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 ----- <u>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u> ----- ----- ----- <u>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u> 별지 제32호의2서식---.</p> <p>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u>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u>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u>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u>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p>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①			미납부 산출세액 ②				납세보증 신청액 ③		과 부 족 ④-(②+③)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증권번호(B/L)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단위	판매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총반출	계										
과세대상 담배 반출	계										
미납세 반출 (과세면제)	계										
<p>「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귀하</p>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서 (<small>납세담보제공확인서번호</small>) <small>(요건승인번호)</small>										처리기간	
세무과-12345(일련번호로 같음)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영업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담 보 종 류			현금 <input type="checkbox"/> , 지급보증서 <input type="checkbox"/> , 기타()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통관세관명							증권번호(B/L)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단위	판매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계											
과세 (빈란)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예:Caos 6mg외70종)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과세면제 (빈란)											
본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제공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div>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세제 담보요 건	확인 내용			해당 사실					
	최근 3년간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실적 있음 []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납세담보 면제 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총반출	계								
과세대상 담배 반출	계								
미납세 반출 (과세면제)	계								
<p>「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귀하</p>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번호) (요건승인번호) 세무과-12345 (일련번호로 같음)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통관세관명										
납세담보 면제요건 확인결과				납세담보 면제 해당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 단위	판매 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계										
과세 (빈란)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예:Caos 6mg외70종)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과세 면제 (빈란)										
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div>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V. 지방소비세 개정내용

지방세법령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지방세법」 §71③3나목 및 §71③4나목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조정교부금 등)의 <u>안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u>하도록 위임</p> <p>*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5에 안분기준과 안분금액 규정</p> <p>○ 「지방세법」 §71③3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 §71③4나목은 세종과 제주에 시·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에 ‘금액’이 명시</p>	<p>□ 안분에 관한 사항 중 안분기준은 시행령 ‘<u>별표</u>’에서 ‘<u>본문</u>’으로 <u>상향</u>, 안분금액은 ‘<u>별표</u>’에서 ‘<u>고시</u>’로 위임</p> <p>⇒ 대부분 시행령 개정 필요</p> <p>○ 「지방세법」 §71③3나목은 해당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u>시행령만 개정 필요</u></p> <p>⇒ 법개정 불요</p> <p>○ 「지방세법」 §71③4나목은 안분금액을 고시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u>현행 대통령령에서 행안부 장관 고시로 재위임하는 규정 필요</u></p> <p>⇒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u>’</p>

□ 개정 내용

- 매년 동일한 안분 기준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산출되는 안분금액은 단순 수치에 불과, 시행령이 아닌 ‘고시’가 법체계에 부합
 - 안분금액 산출에 필요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발표시기 변경(8월말→12월말)으로 안분이 시작되는 다음연도 2월까지 시행령 개정 불가
- ⇒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을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위임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에 대한 지방소비세는 다음달 20일('26.2.20.)부터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납입) ①·② (생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4.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	나.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규정 변경(영§75②)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기준'과 '안분금액'을 시행령 별표2~5에서 규정 ○ (시행령 개정) ○ (고시 신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5 삭제 ○ 별표 2~5의 안분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본문에 규정 ○ 별표 2~5의 안분금액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

□ 개정 내용

-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기준'은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안분금액'은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위임

<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 >

구분	현행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	안분기준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5	⇒	별표 2~5 삭제
행정안전부 고시	⇒	안분금액 신설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frac{\text{제7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기

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6. (생략)

<신설>

5.·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른 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를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

	제75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시·도별 지방소비 세액	=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7. -----

---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른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를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

<p>8. (생 략)</p> <p>③ 삭 제</p> <p>④ ~ ⑧ (생 략)</p>	<p><u>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u> <u>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u> <u>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u> <u>「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u> <u>관한 특별법」 제14조 및</u> <u>「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u> <u>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u> <u>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u> <u>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u> <u>방식에 따라 산정</u></p> <p>8.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

VI. 주민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영§7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input type="radio"/>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input type="radio"/>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급여 등 <input type="radio"/>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신설 <input type="radio"/>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 급여

□ 개정내용

-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u>출산전후휴가</u> 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1의2. ----- ----- <u>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u>

□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m ²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지급 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 (납세지)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부과

- (과세표준·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의 0.5%

* 「소득세법」 §20①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 (비과세)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간의 급여는 제외

- (면세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5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인원내 대해 급여액 과표 공제

- (징수방법)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 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 (납기)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제74조제7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영§7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input type="checkbox"/>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 <input type="checkbox"/>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 개정내용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공제 한도)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 (최대 36만원限)

*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 법정근로수당은 아니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될 경우 지급

※ (예시) ① (A기업) 5년차 종업원(월 급여액 300만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40만원 지급 시
→ 30만원* 공제

* $\text{Min}(\text{Min}(300\text{만원} \times 10\% = 30\text{만원}, 40\text{만원}), 36\text{만원}) = 30\text{만원}$

② (B기업) 3년차 종업원(월 급여액 200만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15만원 지급 시
→ 15만원* 공제

* $\text{Min}(\text{Min}(200\text{만원} \times 10\% = 20\text{만원}, 15\text{만원}), 36\text{만원}) = 15\text{만원}$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u>출산전후휴가</u> 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1의2. ----- ----- <u>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다만,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세법(제74조 제7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규칙§37, 별지 제37호)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서식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서식 현행화

☐ 개정내용

-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서식 정비

관련 조항	주요내용	인용조문	
		개정 전	개정 후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㉔ 연면적에 대한 세액	㉔ 연면적에 대한 세액 (상위 법령 개정 반영)

☐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p>(뒤쪽) 작성방법</p> <p>㉔ 연면적에 대한 세액: (생략)</p> <p>-----「물환경보전법」 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 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 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 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p>	<p>(뒤쪽) 작성방법</p> <p>㉔ 연면적에 대한 세액 :</p> <p>(현행과 같음)</p> <p>-----「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 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 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 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를 말합니다.</p>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② 성명(법인명)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⑥ 사업자등록번호 ⑧ FAX번호

20 년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m ²	m ²	m ²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⑯ 면적(m ²)	⑰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 율	산 세 출 액	감 세 면 액	⑱ 가산세			⑲ 신고세액 합 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합 계								
주민세	⑳ 기본세액							
	㉑ 연면적에 대 한 세액							
㉒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선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 ⑯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 ⑰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 ⑱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을 적습니다.
- ⑳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종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 ㉒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보완 (규칙§38의3, 별지 제39호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input type="radio"/>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보완 <input type="radio"/> 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 개정내용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보완

관련 조항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개정 조문

개정 전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② 성명(법인명)	
	④ 본점 소재지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개정 후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② 성명(법인명)	
	④ 본점 소재지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 서식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인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원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원	⑫ 과세제외급여액 원	⑬ 과세급여총액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인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⑬ / ⑨) 원	⑯ 과세표준 공제액 (⑮ × (⑨ - ⑭)) 원
--	--------------------------------------	--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접수자	접수일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00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00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란

- ⑨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 \times 1 + 15 \times 1 + 20 \times 1) = 45$
-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
- ⑪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
- ⑫ **과세제외급여액**: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급여총액**: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⑪-⑫)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

-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
 -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과세급여총액(⑬)을 종업원 수(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⑯ **과세표준 공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합니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액 =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⑮) × [신고월의 종업원 수(⑨)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합니다)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납부할 세액란

- ⑰ **산출과표**: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⑬-⑯)를 적습니다.
- ⑱ **산출세액**: 산출과표(⑰)에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⑲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⑳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⑲)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input type="radio"/>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인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삭제 <input type="radio"/> 삭제(인용조문 일몰)

□ 개정 내용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9%)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특례가 '17년 종료됨에 따라,
 * 이익의 상당 부분(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권상장법인
 - 「지방세법」상 해당 특례 인용 규정 삭제(제93조제2항제1·2호)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인용조문을 단순 정비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p><u>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u></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p> <p>나. (생략)</p> <p>③ ~ ⑰ (생략)</p>	<p>2. -----</p> <p>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p> <p>나. (현행과 같음)</p> <p>③ ~ ⑰ (현행과 같음)</p>

2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법§103의3⑧)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내주식 등'의 용어 사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내주식 등)	<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용어 변경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주식 등'으로 용어 변경 *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외주식 포함)

□ 개정 내용

- 국세(소득세)에서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외주식을 추가*(제118조의9)하고 '국내주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주식 등'으로 개정(제118조의9~18)함에 따라,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 현행국내주식 → 개정국내주식 + 국외주식

-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방세법 세율 조문도 '국내주식 등' 용어를 '주식 등'으로 개정

※ 지방세법 내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 범위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준용하고 있어 국세 개정 시 자동 반영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9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생 략)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 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u>국내주식</u>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 음 표와 같다.	⑧----- ----- <u>주식</u> ---- ----- -----.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57조의2

□ 개정 내용

- 국세(소득세)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설

* 세전소득 환원방식 : ①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②세액공제 시, 외국납부세액만큼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0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생략)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u>외국법인세액</u>”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신설></p>	<p>② ----- -----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 ----- ----- -----. ----- ----- ----- ----- ----- ----- ----- -----.</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p>

개정 전	개정 후
<p>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u>외국법인세액</u>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u></p> <p>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u>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u>----- ----- ----- ----- ----- -----.</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 ----- ----- -----.</p>

4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법§103의20①)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	
○ (일반법인)		○ (좌 동)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1.9%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좌 동)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개정 내용

-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 상향)함에 따라,
 -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국세의 10% 수준) 상향 조정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1조)
 - ※ (예시) 회계기간이 '25.4.1.~'26.3.31.인 법인의 '2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0.9~2.4%)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 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03조의20(세율) ① ----- ----- ----- -----. 1.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0</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2.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개정 내용

- 국세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기한을 일반법인보다 **1개월 추가 부여**(4→5개월)

* 법인세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절차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게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3→4개월)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2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u>4개월</u>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 ----- ----- <u>4개월</u>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u>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규칙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 <input type="radio"/> 납세조합(<u>근로자·사업자조합</u>)이 납부한 세액의 <u>100분의2</u>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대상 및 지급률 조정 <input type="radio"/> 납세조합(<u>근로자조합</u>)이 납부한 세액의 <u>100분의1</u>

□ 개정 내용

-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교부금 지급 대상 납세조합의 범위(^{현행}근로자·사업자조합 → ^{개정}근로자조합) 및 지급률(특별징수액 ^{현행}2% → ^{개정}1%) 개정

* 국세에서 징수교부금 지급 대상 납세조합의 범위(^{현행}근로자·사업자조합 → ^{개정}근로자조합) 및 지급률(원천징수액 ^{현행}2% → ^{개정}1%) 개정('25.5.1., 국세청 고시)

□ 적용 요령

-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제16조 경과조치)

※ (예시) '25.12.28.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26.1.10.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액의 2%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u>100분의 2</u> 로 한다.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 ----- 「소득세법」 <u>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u> ----- ----- <u>100분의 1</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radio"/> 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input type="radio"/>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57조의2

□ 개정 내용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과 동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현행 직접투자 → 개정 직접+간접투자)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 ----- ----- ----- ----- ----- ----- ----- ----- ----- ----- <u>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u>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u>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② ----- ----- ----- ----- ----- ----- ----- ----- ----- <u>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 ----- ----- ----- ----- <u>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u> ----- -----

개정 전	개정 후
<p>제출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신설></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p>	<p>⑥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p> <p>-----</p> <p>-----.</p>
<p>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p>	<p>⑦ -----</p> <p>-----</p> <p>-----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p> <p>-----</p> <p>-----</p>

개정 전	개정 후
<p>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u>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u>,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 <u>외</u> <u>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u> <u>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u>----- -----.</p>

3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제도개선(규칙§48의4 등)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radio"/> 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서식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input type="radio"/> 감명세서 서식에 간접투자 외국 법인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57조의2

□ 개정 내용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과 동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서식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현행 직접투자 → 개정 직접+간접투자)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생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u>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 ----- ----- ----- ----- ----- - <u>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명세서</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u>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명세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

개정 전	개정 후
	<p><u>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u> <u>증명서류</u></p> <p><u>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u> <u>제8호서식 부표 5의6</u></p> <p><u>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u> <u>제8호서식 부표 5의7</u></p>

< 현행 서식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1. 과세표준계산	10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9	이월결손금				
	110	비과세소득				
	111	소득공제				
	112	법인세과세표준 (108 - 109 - 110 - 111)				
	159	선박표준이익				
2. 산출세액계산	106	외국법인세액				
	107	과세표준(112 - 106)				
	114	세율				
	115	산출세액				
	11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1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11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19	합계(115 + 118)				
3. 납부할세액계산	120	산출세액(120 = 119)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22	차감세액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24	가산세액				
	125	가감계(120 - 121 - 123 + 124)				
	기납부세액	126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127	수시부과세액			
		128	특별징수납부세액			
		129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130		소계 (126 + 127 + 128 + 129)				
산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132	합계(130+131)				
	133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134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37	과세표준				
	138	세율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39	산출세액				
	140	감면세액				
	141	차감세액(139 - 140)				
	142	공제세액				
	14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가산세 제외)				
	144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145	가감계(139 + 143 + 144)				
	기납부세액	146	수시부과세액			
		147	() 세액			
		148	계(146 + 147)			
6. 세액계	149	차감납부할세액 (145 - 148)				
	150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계 (139 + 149 + 150)				
7. 세액계	151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152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150 - 124 - 134 - 144 - 153 + 131 + 135)				
	153	분납할 세액				
	154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150 + 153 - 15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㉓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㉒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㉑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㉑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 외국법인세액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㉑, ㉒, ㉓):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㉒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㉑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㉑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㉒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㉒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㉒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㉒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㉑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㉑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㉒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㉒, ㉒, ㉒)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㉒, ㉒, ㉒)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㉒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㉒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㉒ 분납할 세액란: ㉒ 분납세액 계산 범위가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가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개정 서식(일부 개정)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0000. 00. 0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1. 과세표준계산	108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109	이월결손금					
	110	비과세소득					
	111	소득공제					
	112	법인세과세표준 (108 - 109 - 110 - 111)					
	159	선박표준이익					
2. 산출세액계산	113	법인세과세표준 (112 + 159 + 106)					
	106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액					
	107	과세표준(113 - 106)					
	114	세율					
	115	산출세액					
	11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1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11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19	합계(115 + 118)					
3. 납부할 세액계산	120	산출세액(120 = 119)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22	차감세액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24	가산세액					
	125	가감계(120 - 121 - 123 + 124)					
	126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37	과세표준					
	138	세율					
	139	산출세액					
	140	감면세액					
	141	차감세액(139 - 140)					
	142	공제세액					
	14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가산세 제외)					
	144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145	가감계(139 + 143 + 144)					
	146	수시부과세액					
5. 미환류소득법인지방소득세	15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51	세율					
	152	산출세액					
6. 세액계	153	가산세액					
	154	기납부세액					
	155	이자상당액					
	156	차감납부할세액 (152 + 153 - 154 + 155)					
	157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계 (156 + 149 + 155)					
	158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159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156 - 124 - 124 - 144 - 153 + 131 + 135)					
	160	분납할 세액					
	161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156 + 158 - 159)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㉓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㉒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㉑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㉑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액란: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㉑ 당기 실제 차감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㉑, ㉒, ㉓):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㉒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㉑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㉑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㉑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㉒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㉒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㉒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㉑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㉑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㉒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㉒, ㉒, ㉒)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㉒, ㉒, ㉒)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㉒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㉒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㉒ 분납할 세액란: ㉒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현행 서식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3서식] <개정 2022. 3. 31.>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차감한도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③ 차감한도(①+②)	
당기 차감 대상세액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④+⑤)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⑦ ≤ ③)		
⑧ 이월배제액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⑦-⑧)		

② 연도별 차감 내역

⑩ 사업연도	⑪ 당초 외국 법인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차감액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⑪-⑫)	⑭ 당기 실제 차감액
당 기				
⑮ 합 계				

첨부서류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란: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⑩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⑪ 사업연도란과 ⑫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⑫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2. ⑬ 전기 누적 차감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⑭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⑮ 당기 실제 차감액란: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⑮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1.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경우
가.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경우
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작성 방법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이월된 차감액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외국법인세액의 이월된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이월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 당기 발생 차감액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및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액란: ④ 이월된 차감액과 ⑤ 당기 발생 차감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액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합계 금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한도란의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 ⑥ 당기 차감 대상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④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과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차례로 적고,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⑬ 당기 차감 대상액란: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VIII 재산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법§107②, 영§106)

1 개정 개요

※ 국세 동반개정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요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지방세법 시행령」 위임 < 신설 >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선 ○ (현행과 같음) ○ (예외) 좌동 - (요건) 좌동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input type="checkbox"/> 조합의 범위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 개정 내용

- 조합원들(위탁자)이 납부한 금전으로 조합(수탁자)이 매입한 부동산(금전신탁)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 외 다른 조합도 조합(수탁자)을 납세의무자로 규정

* 관련법에 따라 분양대상 제외 등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

-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수탁자)에 이전하는 경우(현물신탁)는 현행대로 원 소유자인 조합원(위탁자)에게 부과

신탁방식	납세의무자	
	현행	개정
■ 금전신탁	원칙: 위탁자(조합원)	조합(수탁자)
	예외: 수탁자(지역·직장주택조합 限)	
■ 현물신탁	위탁자(원소유 조합원)	좌동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 ----- ----- ----- 위 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삭 제 ② (생 략) <u><신 설></u>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u> <u>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u>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u>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u> <u>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u> <u>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u> <u>합</u>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u>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u> <u>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u> <u>법」 제23조에 따른 조합</u>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 <u>른 마을정비조합</u>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 <u>6호에 따른 조합</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법§108)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선박에 대한 납세지 ※ 모든 선박 ○ 선적항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input type="checkbox"/>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명확화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외 선박 (좌 동)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u>'등록지'로 규정</u>

□ 개정 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소유자 주소지)로 개정

*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 ① 선적항 소재지,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 ②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 ③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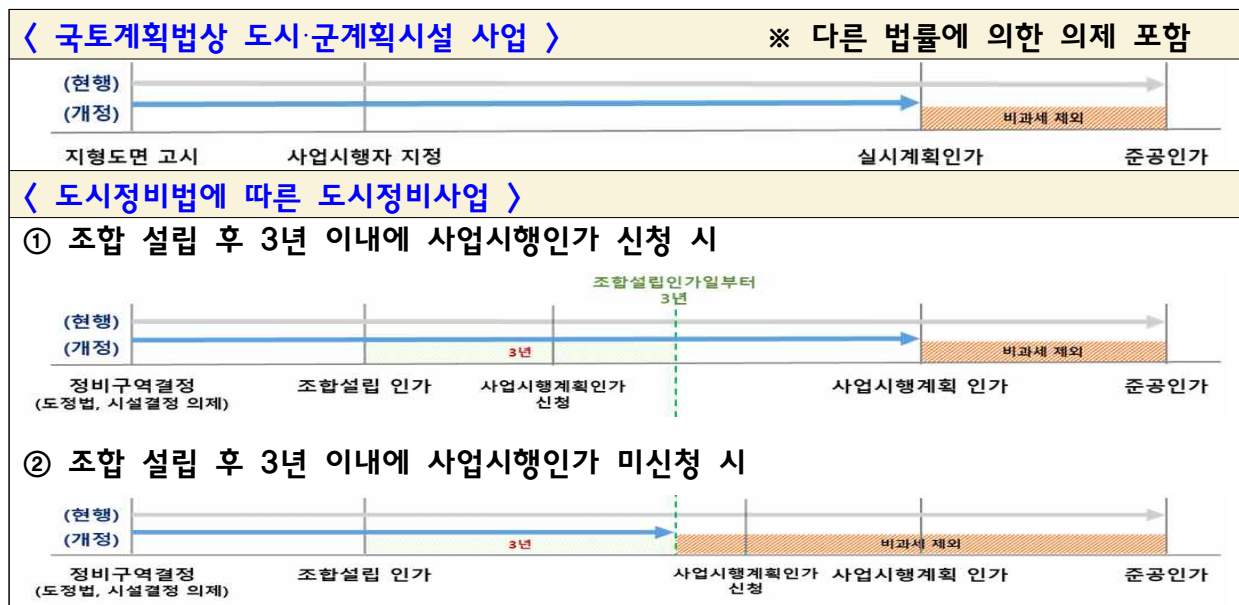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08조(납세지)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u>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u>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u>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p> <p>○ (비과세 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지정·고시된 공공시설용지</p> <p>-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등 이용 시설이 없는 경우</p>	<p>□ 비과세 대상 등 정비</p> <p>○ (범위 명확화) <u>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u></p> <p>○ (미집행 규정 신설) 국토계획법 제88조의 <u>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u></p> <p>*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② 모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 또는 사용권원 확보 ③ 국가지자체가 사실상 점유한 도로</p> <p>- <u>다만,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u></p> <p>○ (대상사업 정비) 각 개별 법률에 따라 <u>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u></p> <p>※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토지 용도제한 등 사권제한 발생</p> <p>(좌 동)</p>

□ 개정 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손실(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감면(지특법§84②)과 동일하게 미집행 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실시계획의 인가(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포함) 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시정비법§20①)을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
- 개별법률(예: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p>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p> <p>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p> <p>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p>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정 개요

※ 국세 동반개정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input type="radio"/>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u>가산금</u>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u>그 신탁재산으로써</u>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 발생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 명확화 ① 신탁재산의 범위를 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및 재산으로 확대 ②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정비

☐ 개정 내용

-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

신탁법 §27【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변경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illegible]

지방세법 시행령

1

자동차검사용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영§101③)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검사용 토지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input type="checkbox"/> 인용조문 정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관련 인용조문 삭제

□ 개정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정기검사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
-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삭제에 따라 재산세 인용조문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종합검사('09~)
○ 정밀검사업무 대행사업자 지정(제64조)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기검사업무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제45조) ▶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제45조의2) ▶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

❖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영§101③-제6호)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의한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인용조문을 삭제해도 별도합산 적용대상은 동일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 ----- ----- ----- ----- ----- ----- ----- ----- ----- ----- ----- ----- ----- ----- ----- <u>「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u> ----- ----- ----- ----- ----- ----- -----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2

매립·간척 토지의 분리과세 기산일과 취득일 정합성 제고(영§102⑦)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매립·간척 토지 분리과세 적용일 <input type="radio"/>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 이내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u> 부터 4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매립·간척 토지 분리과세 시점을 취득 시기와 일치 <input type="radio"/>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 이내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u> 부터 4년 이내 ⇒ <u>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u> 부터 4년 이내

□ 개정 내용

- 매립·간척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시점과 취득세 취득 시점* 일치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분리과세 적용

* 매립·간척 토지에 대한 취득일

- ① 공사준공인가일
- ②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⑦ ----- ----- ----- ----- ----- -----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u>사용승낙</u> 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사용승낙일</u> 또는 <u>허가일</u> 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1. ----- ----- ----- ----- <u>사용승낙</u> <u>·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u> <u>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 허가</u> <u>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u> <u>날</u> -----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3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영§103의2)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input type="radio"/>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input type="checkbox"/>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확대 <input type="radio"/>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의 토지

☐ 개정 내용

- 사실상 건축물 등이 철거·멸실된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 1년으로 확대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u>6개월</u> 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1. ----- ----- ----- ----- ----- <u>1년</u> ----- ----- ----- ----- ----- ----- ----- ----- ----- ----- ----- ----- -----.

1 개정 개요

※ 「법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5.5.1.)」 후속조치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input type="radio"/> 빈집 철거 후 <u>3년간</u> 별도합산 적용 <input type="radio"/>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빈집)에 과세된 세액을 <u>5년간</u> 활용	<input type="checkbox"/> 공용·공공용 사용토지의 세부담 완화 기간 확대 <input type="radio"/>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u>그 기간 전체</u> 별도합산 적용 <input type="radio"/>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u>그 기간 전체</u> 적용

□ 개정 내용

- 국가·지자체 등과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활용 시
 - 세부담상한 설정 시 철거전 주택세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공용·공공용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
 - 별도합산과세 기간도 공용·공공용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생략)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u>부속토지</u>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 ----- ----- ----- ----- ----- ----- ----- ----- 부속토지.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그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 다.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illegible]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illegible]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 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2) (생략)

2. ~ 4. (생략)

-----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

1)·2)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범위 확대(영§110의2①)

1 개정 개요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개정 전	개정 후
<p>□ 1세대 1주택 판단 시 인구감소 지역에 취득하는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p> <p>○ (대상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84개)</p> <p>*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서구·영도구(5개)</p> <p>○ (가액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p> <p>○ (취득시기) '24.1.4.~'26.12.31.까지</p> <p>○ (예외) 기존주택과 동일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제외</p>	<p>□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p> <p>○ (지역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중 수도권·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9개) 포함</p> <p>* 경기·동두천시·포천시, 부산·금정구·중구, 광주·동구, 대전·대덕구·동구·중구, 인천·동구(9개)</p> <p>○ (기준상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p> <p>○ (인구감소지역) 좌동</p> <p>- (인구감소관심지역) '26.1.1.~'26.12.31.</p> <p>○ (예외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p> <p>*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p>

□ 개정 내용

- 지방건설경기 수요 진작 등을 위해 현행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 및 가액기준 확대(「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 현행 세컨드홈 특례

-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1주택 특례* 계속 적용(재산세·종부세·양도세 패키지 지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3~45%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세율 0.05%p 인하

- **(대상지역 확대)** 현행 세컨드홈 특례 적용지역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되
 - *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5.11월 시행)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 지역은 제외*('25.12.현재 9개)
 - * 경기도 동두천·포천시,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등
- **(가액기준 상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세컨드홈 특례 요건 >

구 분	대상지역	가액기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84개 지역 - 수도권 중 접경지역 포함 - 광역시 제외*(군 지역은 포함) *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수도권(접경지역) 4억원 이하 ^{현행유지} ※ 강화옹진가평연천	비수도권 9억원 이하 ^{기준상향}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지역 중 9개 지역 ^{확대} - 수도권 제외(동두천시, 포천시) - 광역시 제외*(군 지역은 포함) *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신설}	

- **(취득시기)**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26.1.1.~'26.12.31.까지 취득한 경우 적용
- **(적용예외)** 기존 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25.10.기준 서울 성동구, 경기 수원장안 등 37곳)
- **(기타)** 납세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2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에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 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 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 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 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 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 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유상승계취득(부담 부증여는 제외한다)----- ----- ----- 가. ----- ----- ----- ----- ----- 수도권(이 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
1. ~ 10. (생략)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u>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u>	

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
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일 것

나. (생략)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
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
원 이하일 것

<신설>

<신설>

경지역은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

----- 9억

원(수도권 중 「집경지역 지

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

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

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

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

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나. (생략)

③ ~ ⑤ (생략)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
-----.

가. 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규칙§60)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 -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제3호) 판결문·법원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input type="checkbox"/> 부동산가액 평가 기간 <input type="checkbox"/>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까지 확정된 가액	<input type="checkbox"/> 인용조문 정비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 인용조문 삭제 ⇒ 종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본문에 직접 규정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액 기준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부동산가액 평가 기간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

□ 개정 내용

- 「지방세법」 제10조를 인용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 인용조문에 따른 부동산 가액 기준을 본문에 직접 규정
-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
 -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부동산 가액 평가 기간에 해당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u>기간</u>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 ----- ----- ----- ----- <u>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u>감정가액</u> 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 ----- ----- ----- ----- <u>감정가액</u> <u>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u> -----
3. <u>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u> 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u> -----
<신설>	<u>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u>

<p><u><신 설></u></p>	<p><u>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u></p>
<p><u><신 설></u></p>	<p><u>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u></p> <p><u>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2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개선(규칙 서식 제59의3)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표기 <input type="radio"/>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u>60%</u>	<input type="checkbox"/> 공정시장가액비율 표기 개선 <input type="radio"/>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표기 -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

☐ 개정 내용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뒷면의 지역자원시설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도록 서식 개선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I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개정 2024. 5. 28.>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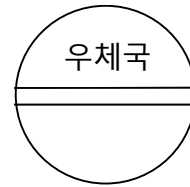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바코드 18mm
음성안내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본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기본]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재산세(주택)				원
도시지역분				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원
합 계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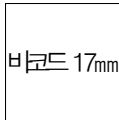
전자납부 번호

210mm × 297mm (CP지 9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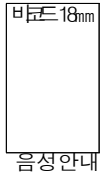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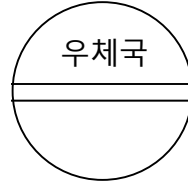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우편반송용



음성안내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주택 기본 재산세

음성
안내



납부하실 금액

원

[기본]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 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	----	----	-----	------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주택)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

세부담상한 초과액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

IX. 자동차세 개정내용

지방세법령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간 불일치 등 <input type="radio"/>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법과 계산식 불일치 <input type="radio"/> 연세액 용어의 의미 혼용 <input type="radio"/> 10만원 이하 연납 공제액 계산 관련 법과 계산식 불일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 <input type="radio"/>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 <input type="radio"/> 연세액 개념 규정 정비 <input type="radio"/>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의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

□ 개정내용

-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치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서 연세액 공제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납부기한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납부기한 불포함)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
 -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개정
- 연세액 개념 규정 정비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서 연세액의 의미가 첫 번째에는 연세액이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의 세액”이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쓰임

- 두 번째 의미의 연세액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으로 의미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p>「지방세법」</p> <p>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지방세법」</p> <p>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p>

-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정비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 부과 가능. 이 때, 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의 조문과 같은 조항의 계산식이 상이함
 - 계산식의 공제 기준을 ‘제2기분 세액’으로 정비

※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6월 연납 계산식의 공제 기준도 ‘제2기분 세액’으로 일치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생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액 신고납부기간</th><th>계산식</th></tr> </thead> <tbody> <tr> <td>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d>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td><td></td></tr> <tr> <td>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td></tr> <tr> <td>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body> </table>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액 신고납부기간</th><th>계산식</th></tr> </thead> <tbody> <tr> <td>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d>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td><td></td></tr> <tr> <td>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body> </table>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tr><th>계 산 식</th></tr><tr><td><u>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td></tr></table>	계 산 식	<u>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	<table><tr><th>계 산 식</th></tr><tr><td><u>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td></tr></table>	계 산 식	<u>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
계 산 식					
<u>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					
계 산 식					
<u>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연납 공제금액 계산 관련 법·시행령과 계산식 불일치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

□ 개정내용

-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법·시행령과 계산식 불일치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개정하여 연납시 신고기간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의 범위 명확화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p>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u>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u>”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u>연세액을</u>,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u>세액을</u>,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u>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u>을 말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u>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u>”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u>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u>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u>세액을</u>,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u>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u>을 말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X. 지역자원시설세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신택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고지</p> <p>○ 위탁자가 신택재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p> <p>- 수탁자에게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 부여*</p> <p>*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동일</p>	<p>□ 신택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p> <p>○ 수탁자에게 신택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 추가</p>

□ 개정 내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택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재산세 관련 규정 준용 근거 추가

□ 적용 요령

- 신택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47조(부과·징수) ① (생략)	제14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 -----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2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시설분 신규 과세(법§142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및 화력 발전에 대해 부과 ○ <신 설>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u>매립폐기물에 대한 과세 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폐기물매립시설(대상 한정)에 매립하는 폐기물 - (납세의무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납세지)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 (세율)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 (부과·징수) 부과·징수(방법, 시기, 특별징수의무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 (납세의무 성립일) 폐기물을 매립하는 때 * 지방세기본법§34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시설 소재지</u> 시·군·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5%를 해당 시·군·구에 교부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폐기물 매립시설 소재지</u> 시·군·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5%를 해당 시·군·구에 교부 * 지방재정법§29-29의2

□ 개정 내용

-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과세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하며,
 -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지역,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필요

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중 략) 시행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Ⅰ 지방재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판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제258조제1항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 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 개정 조문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 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 다. (생 략) <u><신 설></u>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u> <u>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u> <u>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u> <u>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u> <u>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u> <u>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u> <u>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u> <u>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u> <u>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u>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u> <u>이라 한다)</u> 3.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 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제143조(납세의무자) ----- ----- ----- ----. 1. (현행과 같음) 2. -----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147조(부과·징수)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제144조(납세지)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
천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컨테이너 및 폐기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
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물-----

-----.

〈지방세기본법〉

※'26년 상반기 개정 예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 바. (생략) <u><신설></u> 사. (생략)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u> <u>(「지방세법」 제142조제2항</u> <u>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u> <u>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u> <u>때</u> 아. (현행 사목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26년 상반기 개정 예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 ----- ----- ----- ----- ----- ----- ----- -----

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략)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생략)

-----.

1. -----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에 대한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법§146②제3호)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단일 세율 적용 - 발전량(kWh) 당 0.6원	<input type="checkbox"/>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연료별 차등세율 적용 - LNG 연료 : 0.6원/kWh - 일반(유연탄 등) : 0.7원/kWh

☐ 개정 내용

-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현행 세율(0.6원/kWh)을 유지하되, 유연탄 등 이용 시 세율을 0.1원 인상(0.6 → 0.7원/kWh)

☐ 적용 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

I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u>0.6원 <단서 신설></u>	3. ----- ----- <u>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